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파리를 국제 대학교육도시로 만든다	파리
문화·관광	3	‘길거리 공연’ 버스킹 가이드라인 제시	버밍엄
사회·복지	5	‘은퇴자에 자원봉사 기회제공’ 재정지원정책 시행	런던
도시교통	7	상반기에 고속도로로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주행	빅토리아
	9	자전거 신호등 설치 등 ‘도로안전 비전 제로 계획’ 수립	토론토
	11	초소형 차량 사용 등 카셰어링 활성화 실증실험	도쿄
도시계획·주택	13	‘세입자·임대주 분쟁 줄이기’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추진	빅토리아





## 파리를 국제 대학교육도시로 만든다

### 3조 원 투자 ...고등교육·연구·학생복지 역량 강화

프랑스 파리市 / 행정·교육

- 프랑스 파리市는 파리를 고등교육과 연구, 그리고 전 세계의 대학생을 위한 국제 대학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
  - 배경
    - 파리는 중심도시로서의 중요성도 크지만, 그 안의 대학들도 유럽의 세계적 교육 중심지라는 위상을 지님.
    - 파리에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8개를 포함한 370여 개의 고등교육 기관이 있고, 33만 8천 명의 대학생과 연구자, 5천여 명의 유학생이 거주
    - 현 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5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로 선정된 파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2020년 동안 2억 2천 8백만 유로(3조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
  - 주요 내용
    - 투자의 세 범주는 고등교육 역량 강화, 연구 역량 강화, 학생복지 역량 강화
- 1) 고등교육 역량 강화: 파리를 ‘캠퍼스-도시’로 발전시키기
- 파리의 대학에는 캠퍼스가 없고 대학 건물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함. 이에 특정 지역을 대학교육에 특화된 캠퍼스 지역으로 만들 계획
  - 파리 소르본 대학이나 파리 고등사범학교와 같이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대학은 3천 8백만 유로(500억 원)를 투자해 리노베이션
  - 크게 세 지역(12, 13, 18구)에 새로운 캠퍼스를 구축 (지역 캠퍼스 개념)
  - 정부와 부동산 관련 협약을 맺어 학생과 연구자를 위한 주거지 1,800여 개를 건설할 예정이고, 이 중 870여 개는 파리가 직접 운영할 계획
  - 대학과 기업의 파트너십 체결로 학생과 연구자의 주거지와 연구기관까지 통합한 새로운 캠퍼스를 구축



## 2) 연구 역량 강화: 파리를 연구 중심 도시로 만들기

- 5구의 피에르에마리퀴리 대학의 쥐시외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공계 산업·과학 캠퍼스 구축
- 피에르에마리퀴리 대학의 부속기관 앙리 푸앵카레 기관을 리노베이션
- 4구에는 초 분과학문적 성격의 디지털교육 혁신지구를 형성
- 10구의 생-루이 병원 캠퍼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의료지구를 조성

## 3) 학생복지 역량 강화: 파리를 학생복지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 파리에 거주하는 많은 프랑스 대학생과 유학생을 수용할 복지시설의 증축도 중요한 투자 사안
- 충분한 학생복지 공간 창출을 목표로 하며, 특히 학생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강조
- 총 6,000여 곳에 학생과 연구자를 위한 거주지를 증설하고, 대학 식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 학생들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학생이 직접 투표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조합 개념의 학생복지기구인 '크루스(CROUS)'에 930만 유로(120억 원)를 투자
- 앞으로 크루스를 중심으로 대학 식당부터 기숙사까지 학생복지의 많은 부분을 개선할 계획

<http://www.paris.fr/actualites/la-politique-enseignement-superieur-recherche-et-vie-etudiante-de-paris-4197>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 문화·관광

## ‘길거리 공연’ 버스킹 가이드라인 제시

영국 버밍엄시 / 문화·관광

- 영국 버밍엄시는 주로 시내 중심가에서 이루어지는 춤, 공연, 퍼포먼스, 미술 등의 버스킹을 도시의 길과 공공장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긍정적 활동으로 생각함.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킹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개요
  - 기본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허가 없이 버스킹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유지(쇼핑센터, 교회 앞마당, 역 주변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
  - 버밍엄시의 버스킹 가이드라인은 버스커(Busker)와 일반 대중(Everyone)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전·사고가 생겼을 때의 대처법(Resolving issues)이 포함
- 주요 내용
  - 버스커 가이드라인 (공연 시작 전)
    - 1) 주변에 누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
      - 다른 버스킹 장소나 관객에게 너무 가까이 붙지 않도록 함.
      - 주변 상권과 거주자를 항상 고려하고, 밤에는 특히 주의
      - 저녁 8시에서 아침 9시 사이의 스피커 사용은 시의 승인이 필요
    - 2) 안전과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
      - 만약 안전과 이동에 우려할 상황이 생긴다면 버스킹을 중지하거나 연기
    - 3) 버스킹의 주도권을 다른 버스커들과 나누고 바꾸는 문화를 가질 것
    - 4) 공연 시작 전, 관객들에게 자신과 공연을 소개
  - 버스커 가이드라인 (공연 중)
    - 1) 버스킹의 소음이 주변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사운드 체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음의 정도를 확인할 것



- 2) 장비의 소음을 고려
    - 만약 버스커가 징, 북, 브라스, 파이프 등 시끄러울 수 있는 악기를 사용할 때는 더 자주 휴식시간을 가질 것
  - 3) 주도권 혹은 피치를 올리는 행위 사이에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것
  - 4) 공연의 단조로움을 피할 것
    - 각 버스커는 저마다의 공연 레퍼토리, 다양한 음악과 스타일을 가질 것
    - 단순 반복은 소음으로 간주
  - 5) 소리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 브러쉬, 패드, 뮤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것
    - 퍼포먼스를 쉬고 있을 때 배경음악을 틀어놓지 말 것
- 일반 대중 가이드라인
    - 1) 버스커에게 불만 혹은 사건·사고가 있을 때
      -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버스커에게 친절하게 용건을 설명
    - 2) 버스커는 대중과 관객에게 친절해야 하며, 어떤 요구에도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함.
      - 스피커나 앰프의 볼륨을 줄이거나 공연의 장소나 방향을 바꾸는 등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
    - 3) 타협이나 중재가 힘든 경우
      - 도심 운영팀(City Centre Operation Team)에 전화나 메일로 문의
      - 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판단하고, 버스커에게 주의를 주거나 시민과 버스커를 중재
      - 이후로도 부정적 상황이 계속되면, 해당 버스커에게 정식 경고장을 발송
      - 문제가 계속되면 시는 버스커에게 벌금과 물품압수 등의 조치를 함.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48/partners\\_agree\\_new\\_busking\\_guide](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48/partners_agree_new_busking_guide)

<https://www.birmingham.gov.uk/streetentertainment>

[https://www.birmingham.gov.uk/download/downloads/id/5367/guidance\\_-\\_busking\\_in\\_birmingham\\_summary.pdf](https://www.birmingham.gov.uk/download/downloads/id/5367/guidance_-_busking_in_birmingham_summary.pdf)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 사회·복지

### ‘은퇴자에 자원봉사 기회제공’ 재정지원정책 시행

영국 런던市 / 사회·복지

- 영국 런던市는 2011년부터 시행해온 자원봉사 정책 ‘팀런던(Team London)’의 세부 재정지원정책으로 ‘팀런던 소규모 지원금 프로그램(Team London Small Grants)’을 진행
  - 개요
    - 지역 자원봉사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 큰 규모(도시 단위)의 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작은 단체를 지원하여 시정부가 놓치기 쉬운 디테일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
    - 지원받는 단체들은 반드시 59~69세의 은퇴 예정자나 은퇴자들에게 높은 비율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해야 함.
    - 2016년까지 50개 이상의 단체에 55만 파운드(7억 8천만 원) 이상을 지원했고, 2017년에도 10만 파운드(1억 4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
  - 목표
    - 60대(59~69세)의 은퇴 예정자나 은퇴자들이 축적해온 숙련된 기술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지원을 줄 수 있도록 도움
    -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공공 및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노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주요 내용
    - 지원 절차
      -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봉사 계획이 있는 단체들이 지원
      - 심사를 통과한 단체는 3월 27일부터 다음 해 3월 30일까지 봉사·캠페인·프로젝트 등을 진행
      - 긍정적 효과를 보인 활동은 지원 연장



- 사례
  - 셀비 신탁(Selby Trust): 런던 토튼햄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빠르게 지역사회에 제공
  - 월드 라이트(World Write): 런던 젊은이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디어 자선사업이며, 자원봉사자는 주로 방송제작을 가르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
  - 비 어번(Bee Urban):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섭외하여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 커뮤니티들과 나눌 기회를 제공
  - 프로비던스 로우(Providence Row): 지역의 노숙자들과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잠자리·아침 식사·샤워·인터넷 사용을 제공하고,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돕는 단체

<https://www.london.gov.uk/what-we-do/volunteering/effective-community-engagement/team-london-small-grants#acc-i-44057>

[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team\\_london\\_innovation\\_grants\\_guidance\\_2017-final-2.pdf](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team_london_innovation_grants_guidance_2017-final-2.pdf)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mayor-offers-grants-ps10000-increase-volunteer-numbers-london-0>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 도시교통

## 상반기에 고속도로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주행

호주 빅토리아주 / 도시교통

- 호주 빅토리아주는 ‘자율주행 자동차(automated vehicles)’가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시범주행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며, 보고서를 발간해 주민 의견을 수렴
- 배경
  - 주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과 도입 및 시범주행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 도로안전 향상: 운전자의 실수나 피로에 의한 치명적 사고를 줄여, 주정부의 교통정책 목표인 ‘사망사고 제로를 향하여(Towards Zero)’를 실현
    - 교통 효율성 향상: 연계 테크놀로지(connected vehicle technology: 무선 통신으로 다른 자동차나 도로 시설과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혼잡을 피하고 예측 운행을 하는 등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함.
    - 생산성 향상: 운행 시간을 줄이고, 운전 중 다른 업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전자 개인의 생산성 향상
    -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료 효율이 우수하고, ‘통합적인 도로 네트워크(integrated road network)’로 교통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줄여줌.
  - 자율주행 자동차의 잠재적인 미래 가치는 높으나, 실제 도로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법의 개정이 필요
  - 이에 따라, 주정부 교통 당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지원을 위한 미래 방향 보고서(Future Directions Paper)’를 발간해 법규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 주요 내용
  - 주정부는 시범주행 승인을 쉽게 해줌으로써 관련된 혁신 기술과 미래 가치의 현실성을 입증하고자 함.



-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
  - 무자율(no-automation): 운전자가 모든 통제를 하는 단계
  - 부분 자율주행(partially-automated): 자동 주차처럼 특정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며,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살피고 필요할 때 즉각 개입해야 함.
  - 조건 자율주행(conditionally-automated):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처럼 일정 기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항상 상황을 살펴야 함.
  - 고도의 자율주행(highly-automated): 완전 자율주행의 바로 아래 단계로 운전자 없이도 운행이 가능
  - 완전 자율주행(fully-automated): 핸들이 없고 운전자가 아무런 수동 통제를 하지 않는 형태
  
- 시범주행 관련 현행 규정
  - 현재 3단계 조건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는 별도의 승인 없이 운행이 가능
  - 4단계 고도의 자율주행 자동차부터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시범주행이 가능
  - 도로 폐쇄 등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때는 승인 6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향후 계획
  - 주정부는 2017년 2월 3일까지 진행될 미래 방향 보고서의 자문 결과에 기초해 고도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주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범주행에 들어갈 예정
  - 2017년 상반기에 멜번 동남쪽 모내쉬 프리웨이(Monash Freeway)부터 멜번 도심을 관통하는 시티링크(Citylink)를 거쳐 멜번 북쪽의 툴라마린 프리웨이(Tullamarine Freeway)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범주행을 할 계획

<http://www.premier.vic.gov.au/victoria-leading-the-way-on-autonomous-vehicle-trials/>

[http://apo.org.au/files/Resource/future\\_directions\\_paper\\_december\\_2016\\_engage\\_vicroads.pdf](http://apo.org.au/files/Resource/future_directions_paper_december_2016_engage_vicroads.pdf)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



## 자전거 신호등 설치 등 ‘도로안전 비전 제로 계획’ 수립

캐나다 토론토市 / 도시교통

- 캐나다 토론토市는 도로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도로안전 비전 제로 계획(Vision Zero Road Safety Plan)’을 수립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
- 배경
  -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도시이자 북미에서 5번째로 큰 도시로 하루 평균 3백만 명이 시내를 통행
  - 토론토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82로 북미 10대 도시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지만, 시정부는 이를 더 줄이고자 함.
  - 토론토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 (2005~2012년 연평균 47명, 2013~2016년 연평균 64명)
- 개요
  - 비전 제로는 1997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도로안전 정책
    -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Killed and Seriously Injured, KSI)’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도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
    -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도로 이용자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활동 위주
    - 스웨덴의 성공을 시작으로 북미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실행 중
  - 토론토 시정부는 특히 KSI 사고를 줄이는 데 집중
    - 지난 5년간 토론토 KSI 사고의 74%가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 특히 보행자, 노인, 자전거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조사
- 주요 내용
  - 도로안전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요소
    -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를 지도에 대입하고 장기적 경향성을 살펴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
    - 비전 제로 정책을 먼저 도입했던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조
    - 지역 내 관련 업체나 단체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주요 수단
  - 공학적 수단: 도로시설의 디자인과 작동방식을 개선
  - 기술적 수단: 첨단기술로 도로안전 향상 (탐지 시스템, 데이터 분석 등)
  - 교육적 수단: 교통안전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활동
  - 법적 수단: 경찰과 협력해 가장 효율적인 곳에 단속 자원 투입
  
- 6대 중요 대상 주요 개선 사항
  - 1) 보행자
    - 도로 조명 강화, 보행자 자동 감지시스템 설치, 끊어진 보행로 이어주기, 우회전 전용 셋길 폐지, KSI 사고 잦은 곳에 적색 신호 우회전 금지 등
  - 2) 어린이 학생
    - 학교 안전지대 설치, 자동단속 장비 설치, 교육과 단속강화 등
  - 3) 노인
    - 고령자 안전지대 설치, 보행 신호 시간 증가, 횡단보도 거리 줄이기(사거리 모퉁이 확장 등),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 등
  - 4) 자전거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자동 감지시스템, 자전거 전용 신호등, 횡단보도에 자전거 대기 공간(Bike Box) 설치 등
  - 5) 오토바이
    - 오토바이 사고 위험지역 표시, 도로안전 검사에 오토바이 관련 항목 포함, 데이터에 기반을 둔 단속 전략 수립 등
  - 6) 난폭운전과 운전 중 주의 산만
    - 서행구간 도로 폭 줄이기, 이동형 속도표시장치 증설, 각종 금지표지판을 LED로 바꿔 시인성 개선, 데이터 분석 및 수집강화, 교육과 단속강화 등

<http://www1.toronto.ca/City%20Of%20Toronto/Transportation%20Services/VisionZero/Links/2017%20Vision%20Zero%20Road%20Safety%20Plan.pdf>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



## 초소형 차량 사용 등 카셰어링 활성화 실증실험

일본 도쿄도 / 도시교통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급격히 증가하는 카셰어링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쿄도와 지바현을 대상으로 첫째, 초소형 자동차 사용 및 도로변에 공유 자동차 스테이션 설치, 둘째, 고속버스 터미널에 공유 자동차 설치의 실증실험을 진행
- 배경
  - 일본의 카셰어링은 1999년에 처음 보급되고 2002년 사업화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3월 기준으로 스테이션 1만 810개소(전년 대비 14% 증가), 차량 1만 9천 717대(전년 대비 20% 증가), 회원 84만 6천 240명(전년 대비 24% 증가)
- 주요 내용
  - 초소형 자동차 사용 및 도로변에 공유 자동차 스테이션 설치
    - 국토교통성 등은 2016년 12월 도쿄역 근처 중심 업무지대에 있는 오오 테마지역의 출입구에 1인승 초소형 자동차의 카셰어링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사회실험을 시작
    - 도심 대중교통과 카셰어링의 연계성 강화 정도와 활용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 목표
    - 이 실험은 전국 최초로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카셰어링의 실험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예정
  - 고속버스와 연계한 카셰어링
    - 2016년 12월부터 지바현(千葉県)의 이치하라시(市原市)에서 국토 교통성 관동 지방 정비국 주관으로 ‘고속버스 & 카셰어링 사회실험’을 시작
    - 철도와 고속버스 회사인 코미나토 철도 주식회사(小湊鐵道株式会社)와 카셰어링 회사인 타임24(タイムズ24)가 참여
    - 이 사회실험은 고속버스 하차 이후의 카셰어링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함.
    - 고속버스에서 내린 관광객의 실제 카셰어링 이용 여부와 관광지 및 위락 시설 등의 방문 경로를 파악하여, 향후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



- 코미나토 철도 주식회사는 향후 고속버스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일반 버스·택시로 환승하기 어려운 버스터미널 등에 카셰어링을 적극 활용할 것을 고려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초소형 카셰어링 차량(왼쪽) 및 도로 위 스테이션의 개념도(오른쪽)



그림 2. 고속버스 터미널과 연계한 카셰어링 개념도

<http://car-sharing-hikaku.com/history/21>

<http://clicca.com/2016/06/28/382004/>

<http://mainichi.jp/articles/20161220/k00/00e/040/174000c>

<http://response.jp/article/2016/10/28/284437.html>

<http://www.times24.co.jp/news/2016/12/20161215-1.html>

<http://response.jp/article/2016/12/15/287069.html>

이용원 통신원, udesigner201@gmail.com



## 도시계획·주택

### ‘세입자·임대주 분쟁 줄이기’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추진

호주 빅토리아주 / 도시계획·주택

- 호주 빅토리아주는 현행 임대주택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을 미래의 임대 실태와 욕구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될 법안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 배경
  - 호주의 임대주택법은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최근 임대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개정이 필요
  - 호주에서 민간임대(private rental)는 전통적으로 자가 소유로 이전하기 전에 잠시 거치는 단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눈에 띄게 증가
    - 1996~2011년 사이 빅토리아주의 임대 가구 비율은 27%에서 35%로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증가율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130%로 가장 높아
    - 전체 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994년 27%에서 2008년 34%로 증가
  -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임대 거주 증가로 주거 스트레스 증가
    -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는 줄고, 50%를 넘어 ‘심각한 임대 스트레스(severe rental stress)’를 겪는 가구는 증가
  - 임대주택을 투자와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경향 강화
- 진행 상황
  - 주정부는 2015년에 임대 제도 개정을 위한 최초의 토론용 보고서 ‘기초 다지기(Laying the Groundwork)’를 발간해 2016년까지 자문과 의견을 수렴
  -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용 보고서 ‘집으로 향하여(Heading for Home)’를 발간
    - 이 보고서는 세입자와 임대주의 권리와 의무를 재규정하여 양자 간의 분쟁을 줄인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



- 임대주택 관련 이슈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과 의견을 물음.
- 임대주택 관련 주요 민원은 다음과 같이 조사됨.
  - 세입자: 임대주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과 보증금 관련 민원
  - 임대주: 세입자의 임대료 미지급 문제와 주택 손상에 대한 보상 관련 민원
- 2017년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2018년 중반까지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 계획
- ‘공평하고 안전한 주택(Fairer and Safer Housing)’이라는 정책팀과 웹사이트를 구축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

## – 주요 내용

- ‘집으로 향하여’는 임대 단계를 크게 임대 이전, 임대 도중, 그리고 임대 종료의 세 단계로 나누어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

### 1) 임대 이전

-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 이상 고정 기간 장기 임대를 촉진
- 임대주택을 구하는 이들 간의 임대료 경쟁(rental bids) 금지
-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 기준 도입
- 임대 계약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애완동물 금지’ 문구 사용 금지

### 2) 임대 도중

- 임대료 인상을 1년에 1번으로 제한
- 유지보수 의무를 위반한 임대주에게 임대료 청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
-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재 서비스(mediation service) 제도 도입
- 임차인이 현 임대주택을 에어비엔비(Airbnb) 등 상업적 용도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임대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 3) 임대 종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주의 편익에 따른 퇴거 요청 금지
- 임차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때는 임대주의 퇴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퇴거 후에 거주할 숙소를 구할 시간을 제공

<http://www.premier.vic.gov.au/have-your-say-on-victorias-renting-laws/>

<http://fairersaferhousing.vic.gov.au/renting>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